한·EU FTA 타결 임박…전남 축산농가 직격탄

유럽산 돼지고기값 국내산 절반

한국 농가 관세철폐 피해 1조원 이상될 듯

한·EU FTA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전남도 내 양돈농가와 낙농가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관세까지 철폐될 경우 유럽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국내산 가격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결을 앞둔 한·EU FTA 협상 중 축산 관련 주요 내용은 유럽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냉동 돼지 삼겹살과 냉장 돼지고기는 10년,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 부위는 5년 이내에 철폐된다.

현행 25%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는 매년 2.5%씩 감축하게 된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재 EU산 가격은 국산의 86.6%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될 경우 72.1%로 낮아지게 된다.

◇양돈농가 '직격탄'=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대(對) 한국 연간 수출량은 20만t 규모로, 한국 돼지고기 시장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냉장육과 냉동 삼겹살에 부과되는 25%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내 양돈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유럽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kg당 5천123원으로 국산 돼지고기 7천748원에 비해 싸다. 그러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유럽산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4천264원으로 떨어져 국내산에 비해 50~80%가량 싸지게 돼 양돈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남 양돈농가는 1천190가구로 전국 양돈농가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양돈협회 등은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측 농가의 피해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낙농 농가 '불안'=이와 함께 분유·치즈 등 대표적 유럽산 낙농제품의 경우 관세를 10~15년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점차 늘리기로 합의됨에 따라 낙농가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EU 낙농품 또한 지난해 국내 수입량 18만t 중 29.4%인 5만3천t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가격 또한 국내산 원유가격에 비해 40%가량이 싸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가공업체들이 농가별 생산 계획 물량을 축소하게 되면 낙농 농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내 낙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3가구 3만2천두이며, 착유량은 하루 370t에 이른다.

◇정부·전남도 대책=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업분야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양돈산업을 내수보다는 수출 지향적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삼겹살·목살 등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낙농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 확대, 발효유·치즈 등 유가공 산업 활성화, 조사료 급여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사시설 개선 등 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1일 광주교육대학교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 한마당행사인 '해피 투게더 인 광주'에 참여한 이주여성과 가족 등 300여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에 살아 행복해요"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의 정을 나누고 싶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지난 11일 낮 광주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다목적회관. 4~5인용 원형 테이블 50여 개에 이주여성과 가족 300여 명이 자리를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회관 내 스피커를 통해 댄스 버전으로 된 '아리랑' 등 익숙한 가요가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에선 중국과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국의 음식을 가족들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월남 쌈(베트남), 데리야끼(일본), 스파게티(필리핀) 등을 맛보는 이주여성들 얼굴에는 행복감이 배어 있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한 이주여성(37·광주시 북구 계림동)은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음식을 만드는 것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상옥 이사장은 "이주여성들이 고국 음식을 맛보고, 친구를 만나 하루 만이라도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해피 투게더 인 광주'라는 다문화가족 한마당은 여성주간을 맞아 (사)이주가족복지회와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무지개다문화가족회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인 대책위, 도청별관 해법 '5월의 문' '3분의 1'안 채택

'선출직 한계' 독자 중재안 못내고 수동적 결정

지난달 3일 출범한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가 도청 별관 논란의 해법으로 정한 '오월의 문' 안과 '3분의 1' 안은 사실상 논란 원점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사회의 책임 인사들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사실상 도청 별관 논란 장기화를 예고하는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월 단체로부터 별관 문제와 관련해 독자 중재권을 받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인 위원들이 지역 여론에 민감한 선출직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는 한계도 작용했다.

10인 대책위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10인 대책위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별관 문제 해결방안으로 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오월의 문'안과 '별관 3분의 1 이상을 남기는' 안을 동시에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가 이중 하나를 택해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정부가 그동안 수용거부를 공개 천명해온 것으로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대안이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모임에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두 가지 안을 최종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은 당초부터 한계로 지적됐던 중재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인 대책위의 출범 초기 정부와 5월단체로부터 별관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로부터 별관 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비록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안을 전달받아 정부를 설득하는 게 났다는 다수 위원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인 대책위원들간 5월의 문, 3분의 1 존치안을 합의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놓고 격론을 거쳐 다수안으로 이같은 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5월 단체와 추진단을 중재했던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은 "차질없는 문화수도 사업을 위해 설계원안을 존중하는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다수 위원들의 주장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10인 대책위의 또 다른 한계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TV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5월 단체·추진단 등 사실상 별관 논란의 당사자, 전문가들만 참가시켰을 뿐 정작 침묵하고 있는 시민들의 뜻을 밝힐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종일관 별관철거를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힘의 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3~14기 대거 고검장 승진

검찰 고위직 16일께 인사…검사장급 17기 주축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13일)와 취임 직후 바로 있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16일을 전후해 단행될 검찰 수뇌부 인사에선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9석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천 후보자(사법연수원 12기)의 1~2년 후배 기수인 13기와 14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이 3년이나 아래인 천 후보자의 내정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정된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 14기보다는 13기를 주로 고검장에 기용, 용퇴하는 검사장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크다.

13기 중에는 한상대(50·서울) 법무부 검찰국장, 차동민(50·경기) 수원지검장, 황희철(52·광주) 서울남부지검장, 조근호(50·부산) 서울북부지검장, 정진영(50·대구) 서울서부지검장, 박용석(54·대구) 부산지검장, 박영렬(53·경기) 광주지검장, 황교안(52·서울) 창원지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14기에서는 노환균(52·경북) 대검 공안부장, 김진태(57·경남) 대검 형사부장, 안창호(52·대전) 대전지검장, 김영한(52·경북) 청주지검장, 이재원(51·광주) 전주지검장, 채동욱(50·서울) 법무부 법무실장, 박기준(50·경남) 의정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은 박용석 부산지검장, 한상대 검찰국장, 노환균 공안부장, 채동욱 법무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대검차장은 차동민 수원지검장, 한상대 검찰국장, 정진영 서울서부지검장, 황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세평이 무성하고, 새 정부들어 주목받는 공안부장엔 14기 출신 신종대(49·서울) 춘천지검장과 소병철(51·전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고검장 인사와 함께 발표되는 검사장 승진폭은 15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7기가 주축을 이루고 16기 4~5명이 '막차'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승진 기회인 16기에서는 조영곤(51·경북) 법무부 인권국장, 임정혁(53·서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이경재(56·대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임권수(51·전남)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황윤성(50·전북)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거론된다.

17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김희관(46·전북) 2차장검사와 최재경(47·경남) 3차장, 김경수(49·경남) 인천지검 1차장, 송찬엽(49·전북)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의 승진이 점쳐진다. /연합뉴스